

# 광주 발달장애인 부모들 '오체투지' 나서는 까닭은

### 관련 예산 삭감되고 지원팀 해체 등 광주시 이행노력 퇴보 전국 첫 시작 최종증 지원사업도 실효성 있는 정책 못내놔 전문관 제도 부활·주거서비스 확대 등 요구...28일 거리로

광주장애부모연대가 육체 고통을 감내하는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에 나선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최종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되레 장애인 정책이 퇴보하고 있어서다. 부양책임을 덜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지원팀은 해체 됐다는 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목소리다. 광주장애부모연대 등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서 출발해 광주시청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광주시에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정책 마련을 호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전문관 배치,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 확대, 최종증 통합돌봄 사업 구체적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전문관 배치=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발달장애인들은 2018년 7476명에서 2021년 8282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에는 8733명으로 증가했다. 발달장애인은 늘고 있지만 광주시의 발달장애인 '업무 전문관'은 한 명도 없다. 업무전문관은 발달장애인 상담, 지원 등 업무를 전담하는 직책이다.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최대 5년까지 발달장애인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업무전문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어 지난해 광주시 인사 심의위원회가 직책자제를 폐지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운영돼 왔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전환지원팀도 올해부터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산됐다.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 도입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로 임대주택 사업의 LEVEL 1-2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LEVEL 1-2 모델의 경우 'LH 주택 공사'가 소

유한 공공임대 주택에 한해서만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다양한 주거형태가 지원돼야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아파트·원룸·오피스텔형, 연립주택·빌라형 등 장애인들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모들은 "자신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등을 고려해 무상 임대와 주택 임차료 차등 지원, 금리 1% 미만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초저리금리) 간 차액은 정부 지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증 통합돌봄 사업 구체적 계획 수립= 지난 2020년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모자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이후 광주시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돌보기로 했다.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

치해,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전담인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24시간 행동치료와 돌봄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부모들이 입원, 애경사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경우 긴급 돌봄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대 이용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종료되면 또다시 가정 또는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 지원센터내의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마련되지 않아 노사관계로 인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부모들은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서비스 도입 ▲주간활동서비스 다중지원기관 지정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김치 담그는 1122명 김치의 날인 2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행사가 열렸다. 1122명의 행사 참가자들이 김치를 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내년 사립 중등교사 121명 채용

내년에 광주 지역 사립학교 중등교사 121명이 채용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121명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역 22개 법인 소속 37개 학교에서 25개 과목에 걸쳐 교사를 선발한다. 2023학년도에는 12개 법인이 65명을 교육청에 위탁채용했으나 2024학년도에는 참여법인과 선발인원이 2배 이상 늘었다. 이들 사학법인들은 광주시교육청에 1차 필기 시험 등을 위탁하고 수업, 심층면접 등 나머지 선발 일정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에서 공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2023학년도부터 사립 중등 임용시험 위탁채용을 꾸준히 설득했다. 하지만 사학법인 이사장협의체와 시험 출제 주체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점선 시교육감이 직접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꾸준히 소통해 사학법인들의 위탁 채용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교육청은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은 법인은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해 광주지역 기간제 교사 비율을 25~30% 수준으로 낮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인권 단체 "광주시 '모두의 화장실' 설치해야"

광주지역 인권단체가 인권도시인 광주에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단체) 등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과 나이, 성 정체성과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모두의 화장실이란 성별, 나이, 성별 정체성,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장실"이라며 "성별 구분에 차별받는 성소수자와 휠체어 장애인 등이 모두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이 광주지역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수자들이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공문서에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성소수자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았다"며 "성소수자 실태조사 및 인권 증진 정책 수립"을 명문화한 3기 광주인권도시 기본계획대로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두의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 백운광장 차량 통제

27~30일·12월 5~6일 일부 시간대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일부도로의 차량통행이 통제된다.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 푸른길 브릿지 상부 가설 공사 때문에 이달 27~30일, 다음달 5~6일 특정 시간대에 차량통행이 통제된다고 22일 밝혔다. 27일 밤 11시부터 28일 오전 6시 사이 남구청사 앞에서 봉선동 방향의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29일 밤 11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는 백운광장부터 백운초 방향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28·30일·12월 6일 새벽 1-2시는 공사 자재 운반을 위해 모든 교차로 통행이 차단된다. /김다인 기자 kdi@

## 화정 아이파크 불법 하도급업체 대표 집유

신축중인 아파트가 붕괴해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한 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22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콘크리트 타설 업체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월, 벌금 1000만원, 체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콘크리트 다지기 업무를 수행할 숙련공을 제공받았을 뿐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하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가 존재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력을 제공한 펌프카업체가 책임지기로 한 점 등을 보면 불법 재하도급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B씨가 관련 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가형 측과 계약 맺은 부분도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등록 건설업 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설업계에서 불법 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점, A·B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17명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3개 법인 등의 1심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

# 폐교 서남대가

#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 다시 태어납니다!